

# 정확한 피해 규모 밝히기 위해 피해 신청 1년 연장해야

## 진상규명 첫 발 댄 여순사건 <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앞으로 2년, '여수·순천 10·19 사건' (이하 여순 사건) 진상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진상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정하는 것부터 피해자 배·보상, 보고서 작성까지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여순사건 피해 신청 접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전국에 신고처를 설치하고 여순사건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다만 9월 말 기준으로 접수된 신고는 3200여건에 불과해 기존에 집계했던 피해자 1만 1131명의 28.7%에 그쳤다.

유족들이 이미 고통이 된데다 연좌제 피해, '빨갱이' 낙인 등을 이유로 피해사실을 숨겨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 끔찍한 고통에 유족들 전국 흩어져 3개월 남은 신청접수 너무 촉박 7개 시·군 유족회 통합 긍정적 사망자 한정된 배상·보상 개선 집단 매장지 발굴도 서둘러야

다만 유족들은 "전국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활동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전국 7개 시·군에 흩어져 있던 유족회를 하나로 뭉쳐 '여수·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를 출범한 것이 대표적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종합 보고서에서도 "신청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 제한된 숫자의 피해자와 유족만이 진상규명을 신청해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조건에서 수사가 개시됐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해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규종 유족총연합회장은 "유족들은 여순사건의

끔찍한 기억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전국으로 흩어져 버렸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끌어모으는데 1년은 너무 촉박하다"며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락된 피해자가 없도록 하려면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접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배·보상 대상을 보완하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특별법은 의료지원금 등의 배·보상을 유족도 아니고 '사망자'에 한정하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시행령은 여순사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생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치료비, 간호비, 보조장구 구입비로 구분해 산정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생활보조가 필요한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2023년부터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치료비, 간호비(월 56만2000원), 보조장구 구입비, 생활지원비 월 56만여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여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로 한정해 문제가 됐다. 지난 6일 위원회가 공식 인정한 희생자 수는 총 45명

으로, 모두 사망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의료·생활 지원을 해주겠다고 직접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조사 보고서 기확단 구성 또한 신속히 진행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은 위원회 조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추후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뒷받침 자료가 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여순사건을 조사하면서 인원 부족으로 종합 보고서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3·5명의 조사관만 투입하다보니 여수, 순천, 구례, 고흥, 보성 등 5개 지역으로 분할된 별도의 보고서만 작성하는데 그쳐 전남·전북, 경남 서부 등을 아우르는 종합보고서가 없다.

이 소장은 "조사 보고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집단 희생을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문서가 되며, 추후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든든한 방어막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부터 희생자명부, 피해현황 등 구체적으로 기록해 후대

에 물려주려면 책임감 있는 전문가들로 일찍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여수·순천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집단 매장지 발굴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유족 증언에 따라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했지만 전국 형무소와 형제묘, 위령비 등지에서만 일부 성과를 내는데 그쳤다.

암매장지는 유족 증언에 따라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74년이 지난 시간이 지나 증언 가능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80~90대 고령이 된데다 남은 유족조차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므로 서둘러 증언을 확보해 발굴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 소장은 "여순 사건은 다른 국가폭력 사건보다 진척이 훨씬 늦었다. 진상 조사가 이제 막 발을 댔으니 그만큼 더 확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념에 묻혀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으로 드러나고 억울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깨끗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 추념식이 19일 광양시 광양시민광장에서 열렸다. 정부 주최로 여순사건 추념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 "74년 눈물 닦아주겠습니다" 여순사건 정부 주최 첫 추념식

74년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여수·순천 10·19 사건' (이하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이 열렸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 74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이 19일 광양 시민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 정부 주최로 열린 이날 합동추념식에는 정부 대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모 화환을

보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지역 단체장, 전남도민 등 500여 명이 희생자의 영령을 달랬다. 이규종 여순유족총연합회 상임대표와 여순사건 유족 300여 명도 참석해 당시의 비극을 되새기고,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 장관은 추념사에서 "정부도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며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과거사를 해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를 치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함덕수 국무총리는 추모영상을 통해 "진실 규명을 통해 통탄의 세월을 보낸 유족들의 74년 눈물을 닦아주고,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여순사건의 희생자 김병섭씨 유족인 딸 김명자(74)씨의 사연과 전남도립국악단의 창작 무용극은 깊은 울림을 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박관현 열사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집회를 주도한 고(故) 박관현 열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박 열사의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박 열사 유족에게 3억원의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 출신인 박 열사는 1980년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전남도청 앞 민족민주화 대성회를 주도했다.

그는 내란죄 등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40일간 벌이다 1982년 10월 옥사했다.

1990년 8월 개정된 기존 5·18보상법은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해 국가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국가보상금을 받은 일부 유공자들은 광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별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존 5·18 보상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27일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박 열사 유족들을 비롯한 5·18 유공자와 가족들은 11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 열사 유족들 외 다른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은 8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해 총 2000여명이 유사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미지급 운송대금 달라" 광주·전남 화물차주들 고소 잇따라

광주·전남 화물차 운전자들이 택배 협력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이어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 화물차 기사 등 8명이 택배사 협력업체 A사로부터 지난 7~8월 분의 운송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혐의(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A사의 물량을 받아 경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광주에 있는 집하장까지 오가며 택배 상품을 운송했지만 A사가 1인당 약 600만~2000만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다. 총 피해액은 1억 1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A사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900여명, 피해대금은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A사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로 택배사와 불법 다단계 계약을 맺은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에서도 화물 운송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광주광산경찰은 또한 나주지역 화물차주 3명이 운송사 협력업체 B사로부터 운송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

# 상가, 신축부지 매매

-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 4. 매매 - 협의
-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